

[세상보기] 공공조형물, 이의있습니다

충남일보 | 승인 2021.05.27 17:31



남진근 대전시의원

도시를 걷다 보면 빌딩 사이, 강변, 공원 등에 설치된 조형물을 흔히 볼 수 있다.

2015년, 세종시 행정안전부 청사 앞에 '흥겨운 우리 가락' 조형물이 세워졌다.

청사관리본부가 총 11억여원을 들여세운 6개 조형물 중 하나였다.

기괴한 표정에 웃차림마저 마치 저승사자 같은 모습에 시민들은 '소름 돋는다' '무섭다'는 반응을 쏟아냈다. 결국 민원이 속출한 끝에 철거됐다.

환영받지 못하는 조형물 사례는 전국에 한둘이 아니다. 대표적인 게 2016년 서울 코엑스 인근에 만든 '강남스타일' 조형물이다. 4억원을 투입해 말춤을 추는 두 손 모습의 거대한 동상을 두고 가수 싸이 본인도

“과하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2019년에는 홍물 논란을 빚은 포항 공공 조형물 ‘은빛 풍어’가 철거됐다. 3억원을 들여 공항 옆에 설치했는데 추락한 비행기를 닮아 논란이 컸다.

이렇듯 도시의 문화예술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설치된 공공 조형물은 매년 ‘세금 낭비’라는 논란 속에서 작품 수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1퍼센트 법’ 때문이다.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에 따라 10,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을 지을 때는 건축 비용의 1% 이하의 금액을 들여 미술작품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도시의 조형물은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불만한 작품이 못 된다는 것이다. 입찰 자격과 선정 기준이 까다로운 것도 큰 문제다. 공공 조형물은 보통 해당 지자체가 제작할 업체를 모집해 선정한다.

그런데 이에 선정되려면 전문 건설이나 디자인에 대한 각종 증명서와 면허가 있어야 하며, 업체의 신용평가도 높아야 한다.

이로 인해 실력이 있더라도 개인 작가는 접근이 매우 어려우며,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가 적어 공공 조형물 시장에 독과점이 형성되었다. 현재의 입찰 방식은 일부 업체와 그들에 의해 사전에 선정되다시피 한 몇몇 심사위원의 손에서 결정된다. ‘짜고 친 공모라는 이야기다.

법 취지와 달리, 정작 설계 작가는 제작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한다. 실제로 언론들에서 다루는 공공 조형물들은 대체로 작가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회사 내부 디자인 팀에서 제작된 것이 대부분이다.

공공연하고 부당한 방식의 입찰 속에서 작가들은 정작 소외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수준이 매우 낮은 조형물들이 지역 곳곳을 훼손하는 악순환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민간 건축물은 더욱 심각하다. 좋은 작가의 작품을 선정하려는 노력 없이 형식적 절차를 거쳐 세운 조형물은 건물주의 관심밖에 놓이게 되며, 유지관리 또한 미흡해진다. 녹이 슬고 페인트가 벗겨지는 등 도시 홍물로 전락하기 쉽다.

이를 방지하려면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공공 조형물의 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작품의 특성에 따라 수명이 다하면 처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1퍼센트 법’은 대중의 미술에 대한 접근성 향상, 건축물의 미적 가치 제고, 예술시장 활성화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지만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는 ‘공공 조형물 공모제’를 도입했다. 리베이트 요구나 특정 작가 편중 등을 차단하겠다는 이유에서다. 2년 만에 출품 작가 편중 현상이 개선되는 등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LH는 응모 자격 기준을 '만 19세 이상, 조형예술물과 공공조형물 제작 및 설치가 가능한 자'로 완화했다. 이제 도시 조형물이 더 이상 '세금 먹는 흉물'이 되지 않도록 선정 방식의 변화, 관리 제도의 개선 등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



충남일보 webmaster@chungnamilbo.co.kr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